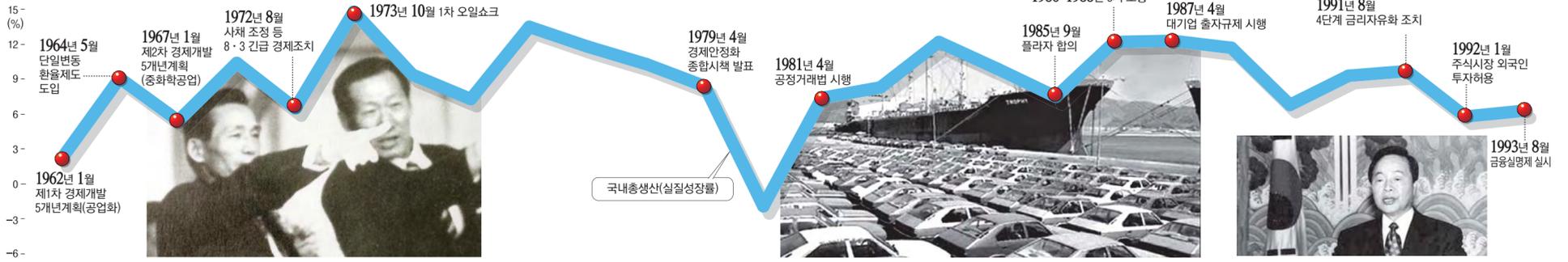


경제성장률과 한국경제 주요 사건



민간주도 경제 요구에 차대통령 “맞짱토론 해보자” 발끈

양날의 검 ‘관치’

정부 개입과 관치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요악이었다.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최상의 가치로 삼았던 1960-1970년대.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대통령 손에서 움직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이 주관하는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와 청와대 주재 무역확대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경제 사안을 직접 챙겼다. 정부 주도 경제운영의 핵심은 관치 금융이었다. 1962년 주요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한국은행을 경제기획원 산하에 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직속 경제기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제학자들이 임박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1968년 박 대통령이 위원회에 역정을 내며 맞짱토론을 제안했던 것도 신현확 위원(전 국무총리)과 송인상 위원(전 재무부 장관)이 “정부 주도 경제개발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입자들이 어디 한 번 민간 주도로 경제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나랑 토론이나 해보자”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번 뿌리내린 관치는 바로잡기 힘들었다. 김대중 전 부총리는 “전두환 대통령 때 금융 민영화를 추진해 보려고 했지만 자신이 없었다”며 “재벌에 넘겨주기도 외국인에 파는 것도 힘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제도를 손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전 부총리는 “한국이 사실상 근대화된 것이 이제 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치 관행이 혼순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 경제운영이 고도성장 달성이라는 과실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질적인 병폐인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와 관치 금융의 씨앗을 잉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정경유착도 문제로 떠올랐다. 김 전 부총리는 “박 대통령 때는 물론 그후로도 전반적인 기업 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었다”며 “요즘에도 비자금 조성이 문제가 되면 걸린 사람만 두들겨 맞는 식 아니냐”고 반문한다. 물가도 강력한 관치 대상이었다. 1973년 10월 초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동 6개국이 원유 수출 가격을 한꺼번에 70% 이상 올렸다. 오일쇼크 앞에서 한국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총괄과장을 맡고 있던 진병 전 부총리는 “배럴당 1.90달러였던 기름 값이 순식간에 11달러까지 치솟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진병 전 부총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규제와 압박이라는 반(反)시장적 조치를 동원했다.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공산품과 농산물 가격을 책정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가 통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진병 전 부총리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정부가 물가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지만, 자원 배분 효율성이 증시됐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강력한 물가 대책이 경제개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제1차 오일쇼크 당시 단행한 강력한 물가 통제와 전제는 1980년대 5공화국 물가안정론으로 계승됐다. 그리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요즘도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시장주의를 표방해온 한국 자본주의 경제사에 적잖은 폐해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경제는 수많은 부침 속에서 부단히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펼쳤다. 일부는 성공적이었고 일부는 실패로 끝났다. 실패한 정책이든 성공한 정책이든 간에 과거의 정책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 경제에 귀중한 자양분이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해법과 길을 보여 준다. 이번 기획은 지난해 12월 시장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 경제의 발전경향 평가와 정책제언’ 보고서와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장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심층 인터뷰에서는 한국 경제를 통째로 뒤집은 결단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이들의 해안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물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었지만 그것 그대로 한 줄의 역사다.

김인호 “쌀은 왜 빗장 못푸나”

UR 개방과도

가수 배일호 씨의 ‘신토불이’라는 노래가 뜬 것은 1992년 국내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한창이던 때였다. “농업만은 개방 불가”를 외치는 분위기에선 신토불이의 인기몰이는 갈수록 거세졌다. 당시 경제 수장은 최규하 경제부총리로 정국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부임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농민이 상경해 화염병과 각목을 들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려는가 하면 한 해 동안 애써 지어놓은 눈을 갈아엎기도 했다. 정부로서는 결단이 필요했다. 국내 농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개방이 불가피했지만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대국민 설득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였다. UR 협상이 한창일 무렵 김인호 당시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제네바 대표부에 경제협력관으로 나가 있던 이남기 국장(이후 공정거래위원장 역임)을 급히 찾았다. 김 실장은 국제전화로 걸어 “우리가 분야별로는 수준으로 국제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답변은 간단했다. “쌀 빼고 모두 다 들어줘도 된다”였다. 이에 김 실장은 “쌀은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쌀 개방을 무조건 막지만 말고 일단 관세를 낮춰 해서 수입을 허용한 뒤 점차 관세를 낮춰 적용하고, 그게 안되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YS, 강경식 경제라인 불신 IMF지원 번복해 혼란 커져

외환위기 시련

1997년 11월 16일 저녁. 강경식 부총리는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엄낙용 차관보를 대동하고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한 장미셀 칸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300억달러 규모의 외화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IMF에 들어가는 것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실제 IMF 지원을 받는데 단 2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허탈한 마음에 강 부총리는 이 총재에게 “이렇게 하면 IMF로 간 것이지요?”라고 묻자, 이 총재는 “IMF로 간 것입니다”고 답했다. 강 부총리는 IMF 지원 합의 사실을 알리던 금융시장 혼란이 급속히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IMF 지원 합의를 이끌어낸 강 부총리는 사흘 뒤인 19일 IMF 지원 내용을 대외에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것. 그러나 공교롭게 이날 강 부총리는 전격 결집된다. 강 부총리 후임으로 임창열 신임 부총리 체제가 들어섰다. 당초 강 부총리가 계획했던 19일 기자회견은 임 부총리가 진행했다. 이날 금융시장 안정책을 발표하면서 임 부총리는 “IMF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강 부총리가 지난 16일 칸드쉬 총재와 합의한 IMF 지원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IMF 지원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후 금융시장 혼란이 다시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21일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IMF에 200억달러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환란 주범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강 부총리는 “혼란의 시작은 IMF 지원 발표를 대외에 밝히기로 예정했던 19일 칸드쉬 총재와 합의한 IMF 지원 합의 내용을 일단 밀로 바꾼 사람들(김영삼 대통령과 임창열 부총리)을 나무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강 전 부총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던 강 전 부총리가 한쪽으로는 IMF 지원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결코 발생할 우려가 없다.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져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식으로 시장흐름과 동떨어진 진언을 계속 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고 상황 대처가 너무 안이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영삼 정부 임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강 전 부총리와 당시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전격 결집한 것도 강·김 경제라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직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정부 내 정책 혼선이 얼마만큼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분양 홈페이지 : <http://jinjeop.booyoung.co.kr>

사랑으로

5년후 내집!

확정분양가로 임대!

5년 임대후 지금 분양가 3.3㎡당 670만원대로 분양하겠습니다. 시세차익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남양주 진접 「사랑으로」부영

특별한 혜택 : 전자제품 무료제공 ※한시적 적용 (LCD TV, 드림세탁기, 양문형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비데(부부욕실))

전·후면 발코니 확장시공(새시포함) 즉시입주 가능!

진접지구

「사랑으로」부영 임대 분양!

- 가치 특권** : 진접 택지개발지구 내 주번시세보다 저렴한 최저분양가, 5년 임대 후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
- 교통 특권** : 서울외곽순환도로, 47번국도 8차선 확장(예정)로 접근성 탁월, 경춘선 북산전철 개통,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 생활 특권** : 병·의원, 대형마트 입점(예정)으로 탁월한 생활 인프라, 왕숙천, 천마산과 광릉수목원, 반성유원지, 배스타운 등 휴양의 한국
- 교육 특권** : 진접지구 내 초·중·고 개교

| 확정분양가 | | | | | | | (단위: 만원) | |
|----------|-----|-----|--------|-----|--------|-------|----------|----------|
| 전용면적 | 세대수 | 구분 | 총분양가 | 계약금 | 입주금 | | 차액 | 비고 |
| | | | | | 입주 전금 | 선납입대금 | | |
| 84.9908㎡ | 993 | 기준층 | 23,500 | | | | 4,700 | |
| 84.9856㎡ | 87 | 2층 | 22,900 | 500 | 16,300 | 2,000 | 4,100 | 월 임대료 없음 |
| | | 1층 | 22,300 | | | | 3,5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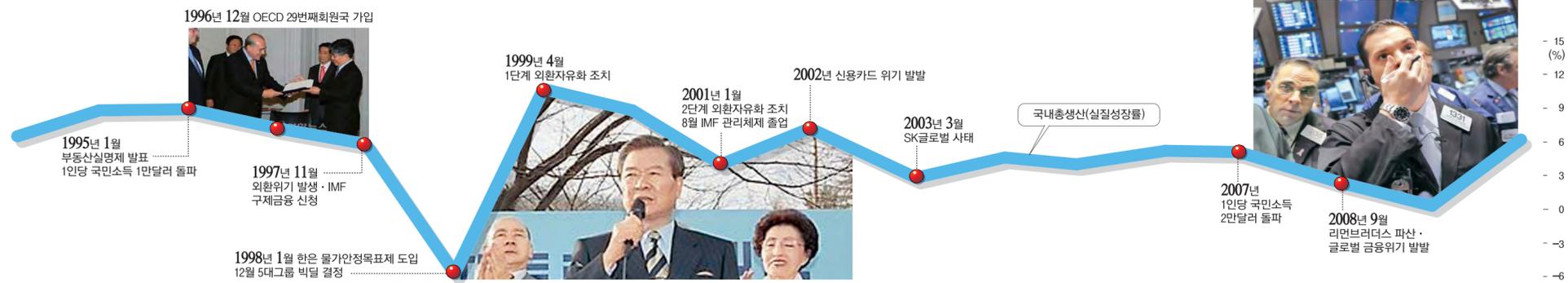
문의 전화

진접모델하우스
031)527-5307~8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주) 부영주택
Booyoung Housing Co., Ltd.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0번지(진접2차 택지개발지구 881) * 분양규모 및 내역 : 지하 1층, 지상 9~15층, 227동, 1,080세대 및 부속(관리실) * 시공 및 시공 : (주)부영주택 * 분양대상 : 시공사 재계약



이규성 “민영화 은행들 주인없어 정치금융으로 전략”

손발 묶인 금융정책

정영자·이철희 어음편취 사건이 터진 1982년 어느 날. 강경식 당시 재무장관이 집무실에서 김병주 서장대 교수, 박영철 고려대 교수, 구본호 한양대 교수 등을 불러 모았다. 난데없이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참석자들은 당황했다.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김병주 교수는 “금융실명제를 하면 독재정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5공 정권은 정영자 사건 이후 이미지 개선을 위해 1982년 7월 금융실명제를 선언했지만 이후 금융황제로 불리던 이원조 씨

김병주 “금융실명제, 경제엔 큰 부작용”

등 권력 핵심들마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YS정부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했다. 김 교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고액 자산가의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경제가 엉망이 됐고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두르게 됐다. 그러면서 자본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IMF 환란이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위기로 대형 은행들이 속속 무너진 것은 1980년대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 지배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81년 한일은행 민영화를 시작으로 1982년 신한은행·한미은행이 설립되는 등 새 판이 짜이는 듯 보였지만 ‘무너진 민영화’였다는 얘기가. 이 전 장관은 “민영화된 은행은 분산된 소유 구조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리 대소에 정치 금융으로 흘러갔다”며 “대출도 기업평가 아니라 대마불사를 기준으로 이어졌고

모럴해저드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은 또 외환위기 이후 토종은행 육성을 위한 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DJ정권 첫 경제수장이던 그는 1999년 1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 자리에서 “은행 소유와 경영구조 문제를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내국인은 4%, 외국인은 10%로 규정된 은행 지배 보유 역차별을 해소해 토종은행을 키워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제벌의 은행 소유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

혔다. 이후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탈에, 한미은행이 칼라일펀드에 넘어 갔다가 고가에 되팔리는 동안 한국 은행들은 망가져 갔다. 론스타에 넘어간 외환은행은 지금도 주인을 못 찾고 있고,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 민영화도 공전만 거듭하는 게 우리 금융산업 현실이다. 지금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금산분리’라는 논리에 가로막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아직도 몇몇 은행을 빼고는 은행장 선임에 정치권 입김이 들어간다”고 한탄한 뒤 “제벌이 은행을 사급고화하기 어

려운 게 현실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제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시기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주인인 은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은행은 한국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동남아 메콩강 개발 계획이 있으면 우리 금융회사들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국제금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기획취재팀 = 박봉곤·이진우·전병득·채수환 차장, 김병호·신현철·이재철·이상덕·이기창 기자

DJ 빅딜정책은 박태준의 아이디어 공정거래법, 5共국보위가 밀어붙여

오라가락 대기업정책

1963년 대기업 전횡 사건인 이른바 ‘삼분사건(三粉事件)’이 발생했다. 밀가루 설망 시멘트 등 분말가루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이 가격 조작과 세금 포탈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은 뒤 비자금을 마련해 집권당(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사건의 전말이다. 이듬해 야당인 민주당은 삼분사건을 폭로하고 특별국정감사까지 추진했지만 대기업과 결탁한 여당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대기업 전횡을 막기 위한 최초의 대기업 정책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때 제벌을 그대로 놓아두면 큰일 나겠다”는 인식 때문에 1964년 공정거래법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회고했다. 이후 몇 차례 공정거래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대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해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논란만 키

운 채 회기 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되기 일쑤였다. 우왕좌왕하던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뒤 빛을 보게 됐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국회를 대신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이사장은 “정상적인 국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반발도 컸지만 이런 식으로도 공정거래법이 통과돼 어찌하면 다행스러웠다”고 밝혔다. 대기업 정책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은 것은 바로 1997-1998년 외환위기 때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제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방만한 차입 경영이 외환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대기업 간 중복 사업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빅딜(사업 맞교환)을 추진했다. 빚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업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라는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처음 정부는 업계 자율로 빅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빅딜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적극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현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55개 퇴출 기업을 발표하면서 ‘빅딜을 거부하는 기업은 여신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손병두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7개 업종을 보면 3개 또는 4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1998년 12월 7일 결국 최종 합의를 보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러나 헛이슈였던 삼성과 현대, LG 전 삼각 빅딜은 반도체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LG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1999년 1월 6일 구분부 LG 회장이 김 대통령을 방문해 반도체 빅딜 수용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빅딜은 자율이든 타율이든 그들 별로 주력 업종과 핵심 기업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에는 메가톤급 태풍이었다.

최종찬 “反시장적 분양가 규제 재임시 애써 막았는데 결국엔...”

부동산 포퓰리즘

서울 지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998년 512만원에서 2001년 652만원, 2002년 919만원, 2004년에는 129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로켓의 ‘수직 상승’을 연상케 하는 수준이다. 결국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2년 4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특히 2003년 11월에 분양한 서울 상암지구 수익률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기폭제가 됐다. 40평형 수익률이 39.2%로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1998년 말에 폐지된 분양가 규제가 표적이 됐다. 200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최종찬 전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최 전 장관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에서 재직기간 중에 반대해서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장관직을 떠난 이후 결국 의원입법으로 분양가 규제법안이 통과됐다. 최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원가 공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다. 내가 반대한다고 하니(노무현 당시 대통령) 나의 주장을 이해해줘 이 문제를 덮어준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만둔 이후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번 원칙이 깨지면 시간이 갈수록 기세가 맹렬해졌다. 2005년 3월 공공택지 내 소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고, 이듬해 2월에는 적용 범위를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그다음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07년 1월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최 전 장관은 “항우장사가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을 막론하고, 국민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정적인들이 그것을 저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토로했다. 최 전 장관은 원가연동제나 아파트 가격을 자율화하고, 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었다면 자연스럽게 한 해에 30만호, 40만호를 지을 수 있어 수요가 충족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었다는 얘기를 했다. 최 전 장관은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옛날부터 자원 배분을 더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모피아 관치 무마하려 은행원 임금 두배 올려

한국경제 병목의 순간들 ② 김만제 前부총리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2-1983년 이철희·정영자 어음 사기 사건, 명성그룹 사건, 영동개발 사건 등 세 건의 메가톤급 금융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특히 이·장 사건은 전 대통령 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심이 들끓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해 정통성이 없었던 데다 금융 사기 사건으로 도덕성에 흠집까지 생기자 위기를 느낀 전 정권은 대대적인 금융권 정풍 운동에 들어갔다. 재무장관이 연달아 2명 경질됐고 시중은행장이 3명이나 구속됐다.

이처럼 금융 혼란이 지속되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1983년 10월 14일 김만제 재무부 장관이 취임한다. 위기를 돌파할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 자율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금융 자율화는 물론 금리 자율화 모두 상당히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금융 자율화 의지는 오래가지 않았다. 재무장관에 취임한 지 열흘째 되던 10월 24일. 그날 오후 4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수송동 청사로 돌아온 김 장관은 주병국 차관과 이형구 재정차관보를 긴급 소집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김 장관은 “서둘러 지시를 수행하도록 하라”고 짧게 말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 차관과 강현욱 이재계장이 바쁘게 움직였다. 시중은행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2시간 뒤 장준보 대변인이 금융권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다. 한국은행 총재에 경제기획원 차관 출신인 최창락 산업은행 총재, 산업은행 총재에는 조달청 차장 출신인 정춘택 은행감독원장, 국민은행장에는 재무부 출신 박종석 감독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경제기획원 차관 출신 정인용 외환은행장과 상공부 차관 출신 김선길 중소기업은행장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은행장직을 관료들이 꿰찼다.

금융권 사기 사건·부실 자체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금융감독 탓이라는 청와대 판단 때문이

정부 은행장악 관행 한순간에 안바뀐다

었다. 이후 이어진 대대적인 은행권 정풍 운동은 결국 이날 모피아(재무부 관료)와 이피아(기획원 관료)가 시중은행을 대거 접수하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김 장관은 당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설명했다. “금융계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흐트러진 금융계 분위기를 쇠신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진을 정비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라고 해서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지요.”

KDI 초대 원장 출신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당시 김 장관도 관치금융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관료들이 대거 은행권을 점령하자 은행원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는 대폭적인 은행원 임금 인상이었다. 임금 인상은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일이었다. 대리급 이상 전 은행원 봉급이 70-80% 올랐고, 일부는 하루아침에 두 배로 뛰었다. 정권의 은행권 접수에 대한 불만을 돈으로 막은 셈이다.

김 장관은 “각 은행은 경비 절감액 범위에서 은행원 처우를 최대한 개선하라”며 “세금을 더 걷는 일이 있더라도 일선 지점장들이 관공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재무부 장관을 거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까지 오른 김만제 전 부총리는 지금도 관치금융의 시대로 정의한다. 이 같은 관치금융은 고질적인 병폐인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정경유착 등 폐해를 끼쳤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관치금융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만 해도 금융 시스템 자체가 미비했던 때라 정부는 외자 도입을 주도하고 이를 할당했다”며 “정부가 이른바 한국 주식회사로 활동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위에서 군림하며 피라미드식 종속 관계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 오늘날 자동차나 조선 산업을 일궈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서서히 시장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민간 주도로 가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확립하려면 소비자보호법, 불공정거래법, 기회 균등을 보장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삼탁 기자



▶ He is... △1934년 경북 구미 출생 △텐버대 경제학 학사 △미주리대 경제학 석·박사 △서강대 경제학 교수 △KDI 초대 원장(1971-1982년) △재무부 장관(1983-1986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86-1987년) △한나라당 국회의원(2000-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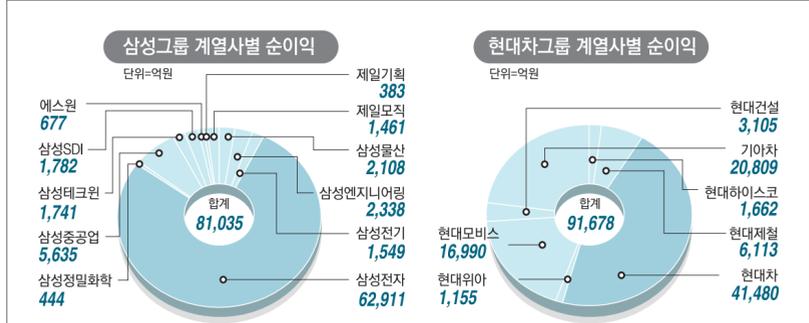
고위급 생생한 증언이 위기해법 찾는데 도움

각계각층 뜨거운 반응 ‘한국 경제 영욕의 순간들’ 기획에 대해 관료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윤석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과거 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사를 모두 속독했는데 정책별로 테마를 잘 선택했고 당시 정책 집행에 참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의 생생한 증언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기획 의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제언과 요청도 잇따랐다. 김용근 국제정 감사담당관은 “과거 위기 순간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관료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 경제가 직면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을 다뤄낸다면 형태로 독자적 전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번 기회에 한국 경제 발전사를 다시 조망하고 평가받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나 시장 관계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외환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결국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무 GS칼텍스 상무는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의 전문성이나 결단의 순간, 그리고 파급효과와 교훈을 면밀하게 분석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찬 유진기업 상무는 “민간인은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 알기 어려운데 매우 흥미진진하게 신문을 읽었다”고 말했다.



□ 상반기 현대차그룹 순이익 삼성그룹 추월

올 상반기에 현대차그룹 순이익(12월 결산법인 기준·금융계열사 제외)이 삼성그룹을 앞선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이제 정보기술(IT)처럼 글로벌 강자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앞으로도 기초적으로 삼성그룹을 앞지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다소 이르다는 진단이다. 현대차그룹이 워낙 뛰어난 실적을 보여준 했지만 삼성그룹 주요 IT 계열사들이 예상 밖으로 부진한 덕을 봤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영환경 삼성이 불리 현대차 순이익 약진 계속될듯

◆사상 최대 실적 현대차, 먹구름 낀 삼성전자

올해 들어 현대·기아차 실적을 이야기할 때 '사상 최대·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다닌다. 지난 5월 월간 기준으로 현대차·기아차 미국 시장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현대차는 올 2분기에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선 103만988대를 판매해 20조916억원의 매출과 2조12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기아차 실적도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기아차는 모닝 K5 스포티지 R 등 주요 차종의 신차 효과와 판매단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상반기 전체로 기아차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0.5% 증가한 22조238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그룹은 간판 계열사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아 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4조원 밑으로 추락했다. 또 IT 주도권이 애플, 구글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서 성장기 전망마저 암울해지는 난국에 빠졌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전례로 매출 76조4200억원, 영업이익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

8.9%나 감소했다.

◆현대차 질주 계속될까 삼성그룹마저 넘어 1위에 올라

선 현대차그룹의 질주가 하반기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영업 호조가 워낙 두드러졌던 만큼 하반기에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유럽차 공세 △일본 업체들 반격 등으로 외부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현대·기아차의 걱정거리다. 증권가에서도 상반기와 비교하면 하반기에는 현대차그룹 실적이 부담이 될 복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도전은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 생산이 하반기엔 거의 정상화한다는 점이다. 관련 포인트는 연·달러 환율이다.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일본차는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차 효과와 안정적인 연·달러 환율을 감안할 때 현대차그룹의 올해 전체 실적 개선은 확실해 보인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추정치 평균(국제회계기준 개별)을 보면 올 현대차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와 34.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과 비교하면 IT가 주력인 삼성그룹 경영 환경은 하반기에도 불확실하다.

공급 과잉으로 급락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과 관련해 글로벌 수요 회복 부진으로 반도체 공급업 체들의 감산이 예상되지만 실제 감산에 들어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LCD 부문도 주요 수요처인 TV 부문 약화로 3-4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스마트폰은 애플 아이폰 신모델의 하반기 출시 예상으로 사정이 상반기만 못하다. 상대적으로 옛 모델이던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비 추가 소요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올해 연간 매출액은 163조원으로 2010년(154조원)에 비해 5.7% 늘지만, 영업이익은 13조원으로 작년 17조원에 비해 20.4% 낮아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도 '구글'로 대변되는 급속한 산업 환경 변화로 실적이 개선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2011년에 비해 실적은 나아지겠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큰 도약을 없을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선 삼성그룹보다는 현대차그룹의 순이익 약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황형주·김규식·김대원 기자**

merry meritZ!

아는 사람은 안다!

하루만 맡겨도

최소 연 3.5% 수익률

기준일 2011.6.23 현재, 세전, 연간, 개인

최대 연 4.6%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높은 수익률에 안정성까지 갖춘 CMA, 메리츠종금증권에서 가능합니다

- 수익률에 적용되는 한도 금액 없음
- 온라인 이체, ATM/CD 출금수수료 무료
- 메리츠화재 전담금용사(보이스피싱) 보험 무료 제공
- 자동납부 및 지로서비스,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급여자동이체 신청가능

CMA를 아는 사람들의 CMA

THE CMA plus

(발행어음형)

| | | | | | |
|------------------------------|---|---------|----------|----------|------|
| 이월일 2011.6.23 현재, 세전, 연간, 개인 | *THE CMA plus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증권금융회사에 있는 권위의 모든 예금보통예금 공적금의 소액의 이자를 위하여 예금보통예금기 10%의 0.5%인정까지 보호받는다. *당사는 본 THE CMA plus에 대하여 관해 설명을 위하여 투자에 앞서 반드시 그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THE CMA plus는 예금보통예금에 해당 시 회사나 고신한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약정수익률은 시장수익률에 상응하는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CMA plus의 계약기간은 만일이 1년 경과 시 해당시장의 고신수익률을 적용하여 발행어음을 재발주 합니다. *증권보통예금에 대한 예금보통예금의 기준의 상한선 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보통예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연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THE CMA plus의 기간별 약정수익률은 1~90일 3.5%, 91~180일 3.7%, 181~270일 4.0%, 271~365일 4.2%, 366일 이후의 이월일 2011.6.23 현재, 세전, 연간, 개인을 적용합니다. | | | | |
| 예금기간 | 1~90일 | 91~180일 | 181~270일 | 271~365일 | 366일 |
| 우대수익률 | 3.5% | 3.7% | 4.0% | 4.2% | 4.6% |

서울 금융투자증권(02)656-6611 | **THE CMA** 메리츠화재 WAM(02)209-0530 | **경기** 신한(02)003-6611 | **충청** 신한(02)209-6611 | **대구** 신한(02)209-6611 | **부산** 신한(02)209-6611
대전 신한(02)209-6611 | **대구** 신한(02)209-6611 | **충청** 신한(02)209-6611 | **경북** 신한(02)209-6611 | **경남** 신한(02)209-6611 | **제주** 신한(02)209-6611
인천 신한(02)209-6611 | **경기** 신한(02)209-6611 | **충청** 신한(02)209-6611 | **대전** 신한(02)209-6611 | **대구** 신한(02)209-6611 | **부산** 신한(02)209-6611
대구 (대구지점) 053-623-6611 | **울릉도** (울릉도지점) 053-623-6611 | **충청** (충청지점) 043-222-6611 | **경북** (경북지점) 053-222-6611 | **경남** (경남지점) 053-222-6611 | **제주** (제주지점) 064-222-6611

1588-3400 www.imeritz.com



□ 43개 사립대학 재정지원 제한

2년연속 대출제한 7곳 '퇴출 1순위'

부실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립대학 하위 15%를 선정했다. 총 43개 대학이다. 이에 따라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개는 명단을 공개했고,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상위 85% 대학을 발표해 하위 15%를 드러내는 형태로 제시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부실 대학에 대해 강한 신호를 보낸 만큼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이들 대학을 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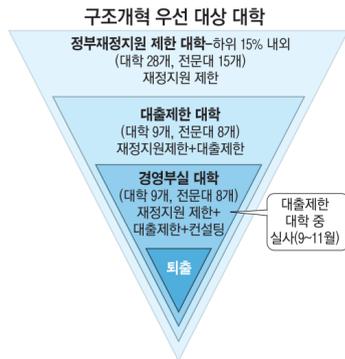
특히 이번 발표에는 상명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대학도 포함됐다.

대학 측 반발도 가시화했다. 상명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문화예술과 사범대 특성화로 운영하고 있어 교직·예술 분야 학생 비중이 약 50%로 프리랜서가 많은데 직장건보 가입자만 반영하는 취업률 잣대로 평가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 수험생 대출 제한 대학 피해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총 17개로 '제한 대출 그룹'(13개)과 '최소 대출 그룹'(4개)으로 나뉜다. 4년제는 9개(제한 대출 6개·최소 대출 3개), 전문대는 8개(제한 대출 7개·최소 대출 1개)다.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 | |
|------------|--|
| 4년제 (28개교) | 건국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군동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대불대, 대전대, 루터대, 명신대, 목원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대, 서울기독대, 선교총대, 영동대, 원광대, 중부대, 인천가톨릭대, 조양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합성대 |
| 전문대 (15개교) | 김포대, 국제대, 동우대, 동주대, 벽성대, 서리대, 부산예술대, 부산정보대, 서해대, 성화대, 세경대, 주성대, 영남외국어대, 응지서우대, 전북과학대 |

* 굵은 글씨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여기엔 대출 제한 대학 17개도 포함된다. 수도권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교과부는 지난해에 이들 43개 대학에 총 1300억 원을 재정 지원한 만큼 예산 13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대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 지원 신청 가능 대상에서 빠진 '하위 15%' 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또 이들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우선 대상이 된다. 대출 제한과 평가 순위 하위 대학은 구조개혁 우선 대상이다. 특히 대출 제한 17곳이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김선결 기자

국립대 6곳 이달중 특별관리 지정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 대학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대학 통폐합,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후 2개월여 만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평가순위 하위 15% 대학)→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7곳 중 최소 대출그룹으로 선정된 7개 대학이 구조조정 1

순위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이날 교과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중심으로 11월 중 실시를 거쳐 12월경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부실 대학에는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후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 조치 등 퇴출을 내린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지구 노력을 통해 지표를 개선하면 다음해 재정지원 참여 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이번 평가의 토대가 된 취업률, 재학생 충원을 등 주요 지표 보정시 지표를 대학이 부풀렸거

나 제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지원 참여 가능 대학에서 제외한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전국 대학의 재정실태 감사 결과도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허위자료 표시 등 심각한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감사 처분을 미이행할 경우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감사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립대의 경우 이번 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9월 중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를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

'PD수첩' 보도 사과드립니다

무죄 판결 불구, 저널리즘 기본 간과 확인 책임 있는 언론 거듭나는 대책 마련

문화방송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1. 다운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 2.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3.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퍼센트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운너 소'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광우병 소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아레사 빈슨은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퍼센트라고 언급한 것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쇠고기 협상 보도가 공익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기본 임무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드러내어 고발하고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기획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과 광우병이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였던 시점에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문화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계기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겠습니다.

- 언론의 첫 번째 임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보도이며, 이를 위해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성을 이유로 부실한 취재를 합리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습니다.

-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절차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해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점검하고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작은 사실이라도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도록 시스템을 고치겠습니다. 더욱 겸손한 태도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1년 9월 5일
(주)문화방송

한국경제 명목의 순간들 ③ 강경식 前부총리

'외환위기 주범' 낙인 찍혔지만 금융개혁 제기된 것으로 위안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조소소를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 회장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지냈던 강경식 전 부총리 얘기다. 강 전 부총리는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은 정부와 기업이 동업 관계를 이룬 '관제 카르텔' 구조였다"며 "그 카르텔이라는 것이 성공하면 민간의 것이 되고 실패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고 회고했다.

강 전 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5·16 혁명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개별 재산을 모두 환수하려 했지만 이병철 씨가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재산을 환수하지 않는 대신 이씨가 전국 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만들고 기업들이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은 1972년 8·3 사태(동경긴급조치(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8월 3일을 기점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무효화시키고 이자 상환 시점을 늦추는 한편 이자율을 대폭 내려 고금리를 원천 봉쇄했다. 이 같은 초법적 조치를 통해 고속 성장과정에서 과도하게 빚을 진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때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기업 특혜였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간 결탁은 모럴 해저드를 낳았다. 강 전 부총리는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 사례가 8·3 조치"라며 "이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재벌들이 빚을 갚내지 않는 체질로 바뀌었고 기업들은 한층 정부 의존적이 됐다"고 반성했다. 차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늘리면서 1997년 국제통화



기금(IMF)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도 있다. 아이러니하게 강 전 부총리는 반시장적인 8·3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됐다고 토론했다. 강 전 부총리는 "8·3 조치 당시 물가국정이었는데 경쟁 구조를 만들면 품질도 개선되고 원가도 절감되지만 정부 관리와 상의해 가격을 결정할 경우 기업들이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경쟁을 시키면 정부가 원가를 정하는 것보다 훨씬 싼 시장가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 간섭을 줄이고 시장의 힘을 키우는 경제정책 전환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1979년 4월 17일 내놓은 '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이다. 안정화 시책은 경제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시장경제 핵심인 시장자를, 개방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안정화 시책이 실제 정책기조로 자리 잡은 것은 전두환 제5공화국 때다. 강 전 부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책전환을 결정했다. 정책전환을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번의 토론을 토대로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고 밝혔다.

강 전 부총리는 시장경제 강화

를 골자로 하는 안정화 시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 토대가 됐다고 확신한다.

강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발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안정화 시책 이후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개방"이라며 "이 두 가지로 인해 좌과정권 10년이 있어도 한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강 전 부총리는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요즘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제 누구에 의해 한국 경제가 망가질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 DNA가 북한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정권이 3대 대물림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도 그처럼 될 수 있다. 시장경제를 해치는 세력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지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 전 부총리를 이야기할 때 추후글씨처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다. 외환위기 주범이라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 강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희생양이 됐지만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이 정도 수준의 금융개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 He is... 강경식 전 부총리는 1936년 경북 풍기에서 태어났다. 박정희 정부 때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지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재무부 장관(1982년), 대통령 비서실장(1983년), 14·15대 국회의원을 거쳐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맡아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강태진 서울대 공과대학장



유진녕 LG화학 기술연구원장

□ '부품·소재정책 2.0' 어떻게...

SW인력 태부족... R&D 투자만으로 '한계'

-사회(최희천 서울대 교수)=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품·소재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부품·소재 분야 대일본 수출은 올해 1-8월에 전년 동기 대비 30.8% 늘었다. 반면 수입은 6.9% 늘어나는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폭이 9억5000만 달러 줄었다. 일본이 처한 위기를 이용한 일시적인 전략만으로는 부품·소재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부품 분야는 꽤 성장했는데, 소재 분야는 아직도 부진하다. 소재 분야 산·학·연 생태계 조성이 매우 절실한 과제다.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장=최근 10년간 전체 산업에서 무역흑자는 4.4배 늘었다. 하지만 부품·소재 무역흑자는 무려 28.9배나 늘었다. 부품·소재 분야 수출 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추월해 세계 6위로 도약했다. 완제품 수출을 위한 부품·소재 수입 구조에서 이제는 부품·소재도 수출 전선에서 점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리튬전지와 같은 세계 1위 분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선행 투자와 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사회=부품·소재도 소프트웨어(SW) 연계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데. ▶강태진 서울대 공과대학장=앞으로 10년 후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8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 SW가 제조업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면서 인력 수요도 그만큼 폭증할 것이다. 현재 국내 SW 개발 인력은 15만명 정도인데 100만명은 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불법복제로 SW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위축시킨 측면도 있다.

▶유진녕 LG화학 기술연구원장=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의 생산 거점 분산 요구가 커지면서 SW 산업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구미계 자본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이 SW 분야 글로벌 인수·합병(M&A)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기업들도 전략적인 투자와 활발한 M&A를 통해 기술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완제품에 비해 부품·소재 산업이 부진했던 이유는 뭔가.

▶문승현 (주)서남 대표이사=신기술이 개발돼 상용화하기까지는 평균 25년 정도 걸린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될 때까지 알아서 크라고 방관하지 말고 장기간 육성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정밀 부품·소재를 일본과 독일에서, 저가적 소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산 부품·소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돼 있지 않다. 대기업과 중

글로벌 위기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 지각 변동과 원화 강세 등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며 왔던 수출 환율이 급변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정부와 기업, 학계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부품·소재 산업 육성 방안과 IT 분야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부품분야는 꽤 컸는데 소재분야 아직도 미흡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소기업이 공동으로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대기업이 이 제품을 일정한 기간 구매해주는 등 인큐베이팅 협력이 필요하다.

▶김원장=부품·소재는 완제품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고 경로 의존성도 큰 분야다. 반면 수출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높은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위주, 대기업 완제품 위주 육성 전략이 채택되면서 부품·소재는 단순한 공급 기능만 강조돼 왔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할 시점이다.

-사회=우수 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도 심각하네.

▶강학장=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잡(Job) 미스매칭' 문제가 심해졌다. 산업 현장에서 퇴직하는 인력을 교수로 초빙하는 지원 정책이나 낙후된 산업 현장에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대책은 일과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계승돼야 한다.

▶유원장=2008년 신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해 기술 개발이 성과를 내면 급여도 인상하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공계 졸업자들도 고소득 전문직과 동일하게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사회=IT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향후 과제는.

▶윤차관=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SW 분야에서도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나가야 한다. 자동차로 따지면 포니 시대가 아니라 첨단형 전지차 시대로 이행하는 셈이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큰 분야는 독자적 연구개발(R&D)보다는 M&A나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이른바 개방형 기술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고수익·고위험 핵심 소재를, 중소기업은 2차 소재와 요소 부품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공생 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대표=정부가 숫자를 쫓아 놓고 미래 산업이나 트렌드를 결정하면 그 분야에서 제외된 부품·소재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은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에 상용화할 수 있는 부품·소재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능성 진단과 지원 업종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품·소재와 IT 산업을 특정 부처에 한정하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채수환 기자 정리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장



문승현 (주)서남 대표이사



최희천 서울대 환경재료학 교수

Advertisement for Pink Ribbon Love Marathon. Includes text: '아리따운 내 가슴 사랑',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 모집 안내', '일시: 2011년 10월 9일(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동시 실시',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주최: 한국유방건강재단, 주관: AMOREPACIFIC CORPORATION'.

Article titled '한국경제 명목의 순간들 ④ 진념 前부총리'. Subtitle: '복지논쟁 35년전에 이미 시작돼 당시 차대통령 무릎 탁 치며 공감'. Content discusses the 1976 EPB plan and the 76th 4th Economic Development Plan. Includes photo of Kim Jong-nam and text: '76년 4차 경제개발 계획대 기획원 젊은관료들 주도', '76년 4차 경제개발 계획대 기획원 젊은관료들 주도', '76년 4차 경제개발 계획대 기획원 젊은관료들 주도'.

유제품 친목회 알고보니 '가격담합회'

"유맥회·우방회(우유), 유정회(치즈), CSI(두유)를 아시나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제품 업체 간 가격 담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 '친목회'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8개월 새 공정위가 이들 4개 친목회를 집중 파헤쳐 밝혀낸 것만 분류·우유·발효유·두유·치즈·커피 피 등 무려 6개 품목, 담합 의혹을 밝히는 '급소'로 친목회를 지목해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추가 담합 행위까지 밝히는 계가를 올리고 있는 셈이다.

13일 매일경제신문이 유유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 내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12월 분유 제품 리베이트를 시작으로 올해 7월 컵커피 담합까지 8개월간 과정금·검찰고발·벌금·시정명령을 무려 7건이나 내렸다. 이는 1981년 공정위 창설 이래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전무후무한 처분 기록이다.

이를 시정명(공정위 전원의회의 의결일 기준)으로 보면 △2010년 12월 산부인과 분유 납품 리베이트 △2011년 2월 두유 가격 담합 △4월 마트 우유 '담' 증정행사 중단 담합 △5월 학교급식 우유 가격 담합 △5월 시유·



공정위, 분유 발효유 치즈 등 8개월간 7건 적발 유맥회·우방회·CSI 등 친목회 굴비 엮듯 조사

발효유 가격 담합 △6월 치즈 가격 담합 △7월 컵커피 가격 담합 처분이 잇달아 내려졌다. 유가공 업체 중 매일 유업이 유일하게 이들 7개 처분 모두에서 혐의가 확인돼 불공정 행위 '7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매일경제신문이 각 사건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운영해온 '친목회'를 집중 파헤치면서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적발 성과를 거뒀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유맥회는 서울·남양·매일 등 메이저 업체들을 중심으로 11개사가, 우방회는 방문 판매를 위주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8개사가 모여 결성됐다. 유정회는 서울·매일·남양·동원 등 4개사가 치즈 제품 관련 가격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다. 공정위는 최초 유맥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 실무자에게서 일반 우유 제품뿐 아니라 컵커피 제품에서

도 일부 업체 간 가격 담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처럼 피리에 피리를 무는 자백을 통해 분유-우유-발효유-두유-치즈-커피피로 이어지는 유제품 전반에 걸친 카르텔 구조를 파헤칠 수 있었던 것이다.

'CSI'라는 영문 이름을 가진 두유 업체 간 친목회도 흥미롭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삼육·연세·매일 등 두유업체 4개사는 2001년부터 가칭 CSI(untraCeable Staff meeting·추적 불가능한 실무자 모임)라는 담합 장구를 만들었다.

유맥회를 정점으로 각종 스단위 친목회가 생겨나면서 업계 간 담합 사슬이 구조화한 셈이다.

한 업체 직원은 공정위 조사에서 "유맥회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하면 유맥회 담당자가 회사 내에서 질책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또 담합 시 실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지 최초 탐장급 이상이 만나면 모임은 해가 지날수록 대리·수습사원급으로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책임을 피하려는 상사를 때문에 결국 대리급 이하 직원들이 친목회 실무자로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철 기자

한국경제 영복의 순간들 ⑤ 이규성 前재경부장관

독과점 메가뱅크 체제 안돼 대기업 은행소유 허용해야



1999년 3월 이규성 전 재경정부 장관은 김대중(DJ) 정권 들어 첫 경제 수장에 발탁됐다. 하지만 이 전 장관으로서의 탈각 장관직을 맡은 것이다. "나라가 어려운 때 일신상 편안함만 추구해선 안 된다"는 김용환 당시 자민련 부총재 권유 때문이었다.

취임 초기부터 발목을 잡는 날이 많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후속공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삼일음란을 걷는 듯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DJ에게 매우 주재보고를 하고, IMF와 매일 구조조정 합의문을 새롭게 고치며 정신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러나 외국 언론들은 여전히 위기를 조장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해 4월 7일 '인내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홍콩을 제외 한 아시아 국가에서 제2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5월 8일엔 이코노미스트지가 "김대중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으로 국가를 부도위기에 구해줬지만 개혁 조치가 가속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를 증폭시키는 외신 보도에 울컥하는 마음이 솟구쳤지만 "튼튼한 금융과 기업을 만드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금융 정상화를 위해선 자본이 절실했다. 공적자금만으론 불가능했다. 6월 초 DJ와 함께 직접 미국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 래리 서머스 재무부 부장관 등 미국 관리들은 까칠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IMF 요구였지만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도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1999년 4월과 2000년 말 두 차례로 나눠 외환거래를 자유화한다는 계획이었다. 1998년 5월 25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도 완화해 외국인에게 대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위기로 중시나 원화값이 출렁일 때마다 너분 기업 R&D 투자는 5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심시보 기자

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대기업에 대해 은행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이 전 장관이지만 메가뱅크론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는 "현재 우리 은행이 빅4 체제인데 이것을 빅3, 빅2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인수·합병(M&A)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오히려 은행의 글로벌 경쟁력 등 소프트웨어를 키울 때지 무작정 덩치를 키울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금융 리더들 사고와 경영방식은 현 경제와 한계를 넘어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아직도 우리 은행의 국외 지점은 단기 차입에만 애를 쓴다"고 꼬집었다. 외화 차입이 아니라 원자력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 개발도상국 경제개발계획 참여 같은 프런티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얘기가. 결국 금융 리더들 소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고언이다.

금융 자유화로 가는 길에 역행해선 안 된다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너무 이른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 뒤로 가려는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는 뜻이다.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인 투자에 따라 춤을 춘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응력과 적응력을 더 키울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한국 경제 성공 요인은 한국적인 '역동성(dynamism)'에 있었다"며 "이제부터는 거시경제 안정, 대외개방 확대, 사회안전망 보완, 투명한 지배구조에 더 큰 가치를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철 기자

6공 때 재무부 장관에 이어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재경정부 장관을 맡아 IMF 체제 조기졸업을 이끈 경제 관료다. 1939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12회 고등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지금도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980년대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환관 때 했던 것처럼 필요 같은 기관을 통해 '클린뱅크'를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랬다면 외환위기를 견디며 더 강한 토종은행이 몇 개는

이 전 장관은 "1980년대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환관 때 했던 것처럼 필요 같은 기관을 통해 '클린뱅크'를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랬다면 외환위기를 견디며 더 강한 토종은행이 몇 개는

이 전 장관은 "1980년대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환관 때 했던 것처럼 필요 같은 기관을 통해 '클린뱅크'를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랬다면 외환위기를 견디며 더 강한 토종은행이 몇 개는

이 전 장관은 "1980년대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환관 때 했던 것처럼 필요 같은 기관을 통해 '클린뱅크'를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랬다면 외환위기를 견디며 더 강한 토종은행이 몇 개는

이 전 장관은 "1980년대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환관 때 했던 것처럼 필요 같은 기관을 통해 '클린뱅크'를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랬다면 외환위기를 견디며 더 강한 토종은행이 몇 개는

이 전 장관은 "1980년대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환관 때 했던 것처럼 필요 같은 기관을 통해 '클린뱅크'를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랬다면 외환위기를 견디며 더 강한 토종은행이 몇 개는

이 전 장관은 "1980년대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환관 때 했던 것처럼 필요 같은 기관을 통해 '클린뱅크'를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랬다면 외환위기를 견디며 더 강한 토종은행이 몇 개는

이 전 장관은 "1980년대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환관 때 했던 것처럼 필요 같은 기관을 통해 '클린뱅크'를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랬다면 외환위기를 견디며 더 강한 토종은행이 몇 개는

박재완, 성장률 하향 시사 "내년 4% 중반 조정 가능"

정부가 애초 4% 후반대로 전망했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 중반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4.8%로 봤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바뀔 수 있다"며 "내년 전망치 확정엔 연말에 하겠지만 하방위험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달 말 예산안을 낼 때 최대한 근접한 전망치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수정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4%대 후반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재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는 기조에 변함이 없지만 내년을 본다면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게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2012년 국내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치인 4.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여 있는 전세 호가표. 4억8000만원짜리 전세 매물이 5억2000만원으로 한꺼번에 호가가 4000만원이나 올랐다. <김효영 기자>

韓 R&D투자 GDP 대비 세계 3위

15% 늘어 43조8000억원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투자를 꾸준히 늘린 덕에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3위로 올라섰다. 2009년 순위(작년 집계)는 세계 4위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공공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2만95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0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규모가

43조8548억원으로 전년(37조9285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 주체별로는 기업이 32조8032억원(74.8%),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6조3061억원(14.4%), 4조7455억원(10.8%)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정부 R&D 투자가 적극 나선 것이 주요 배경이다. 대기업은 전년에 비해 약 4조원을 더 투자했고, 정부 투자

는 1조4000억원 정도 늘었다. 특히 대기업 투자는 일본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국가 전체 R&D 투자액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인데, 한국 기업 중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 투자총액은 2010년 약 15조원으로 전년 대비 23%가량 늘었다.

반면 일본 상위 10대 기업 R&D 투자총액(2009년)은 4조578억엔으로 2008년에 비해 16%가량 줄었다. 산업기술진흥협회 분석에 따르면 일본 기업 R&D 투자는 5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심시보 기자

IGM 세계경영연구원

대한민국 CEO 여러분!

직원에게는 마케팅 능력보다 협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마케팅은 승리를 꿈꾸는 것이지만, 협상력은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협상, 배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유일의 종합 협상교육 전문기관 **IGM** 협상스쿨

직무별, 영역별 협상교육

- 구매, 영업, 노사, M&A, 변호사 등
- 건설, 제약, 금융, 유통 등

우리기업의 실제 사례로 학습

사전 인터뷰와 사례어를 통해
우리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협상력 진단

IGM 협상스쿨이 개발한 협상력 지수
NPI를 통해 협상력을 객관적으로 분석

협상 Clinic

실전 같은 모의협상과 모의협상
비디오 피드백을 통한 협상 코칭

"협상은 골프와 같다. 체계적으로 배우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나는걸 확실하게 느꼈다." - 남동 LG전자 前 부회장 -

"짧은 시간 동안에 협상에 관한 관점과 기본적인 원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 김선생 SK 그룹 부회장 -

현대건설, 포스코, GS (S)텍스, 삼성전기, LG전자, 두산그룹, 농심, SK 헬스케어, S-Oil, 롯데건설, 효성, LG U+ (이온), 아모레퍼시픽, SK건설, 한화, 모스코건설, CJ 오쇼핑, KT, 현대기아자동차, LS전선, 기업은행, 한국에너지, 하나금융그룹, 현대오일뱅크, 미래에셋, GS리테일, 동부하이텍, 삼성시, 포스코 ICT, 보광, 해피리메트, 롯데건설, 필림모리스, 대한도시기상, GS건설, 교보생명, 르노삼성자동차, 삼성인력개발원, 플루워, 파라다이스 그룹, 시노피아벤처스, 삼성증권, 대림건설, 동부차재, 매일유업, 청자이머빌, KC 코트렐, SK E&S, 휴맥스, 화인텍, 투산인프라코어, 국제청, 외교통상부, 경기도청,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노동발전,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CEO 781명, 임원 271명, 실무자 7673명 / 강의횟수 4221(10회 미만), 순수교육주최자수 149명(NPS 82.1%)

공개교육 김은정 실장 T.02)2036-8338 E.ejkim@igm.or.kr | 기업교육 김광진 이사 T.02)2036-8330 E.kjim@igm.or.kr

www.negoschool.com

▶ 시리즈를 마치며...후배들의 '솔직토크'

시장은 보호의 대상...통제의 대상 아냐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관치(官治)에 대한 공과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책이란 게 매순간 최선을 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경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대기업 혼자서 안 되고 부품, 소재업체, 심지어 통신까지 융합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대기업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을 주는 평판 효과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치 포퓰리즘은 경제를 망치는 '악의 손'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와 관치의 야합이다.



과거 경험은 그대로 과거자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반면교사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길을 찾는 디딤돌 구실을 할 수 있다. 반복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길 잃은 한국 경제'도 역사적 교훈 속에서 배워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제 명목의 순간들' 시리즈를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김경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와 좌담회를 하고 한국 경제와 관련해 영원한 논쟁거리인 관치, 포퓰리즘, 대기업 정책 등에 대해 '솔직 토크'를 벌였다.

-과거 관료들도 관치와 시장경제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한 것 같다. 관치는 필요악인가.

▶**구 관리관**=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우리 경제 틀을 잡아 나갔는데 이때부터 정부가 관치를 한 거다. 공과는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세컨드 베스트(차선) 이상은 하지 않았나 본다.

▶**김 실장**=국가가 방향성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상당한 성과도 거뒀지만 일부는 문제가 돼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빅딜'이 그렇다. ▶**이 교수**=최근 가장 시장 역행적인 관치가 바로 'MB 물가'다. 물가는 환율과 금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큰 흐름을 보고 대처해야 하

시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제도지만 시장 참여자(건설사)는 반대한다. 이윤배반적이다. 자기 나름의 시장이 있는 것이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시장은 없는 것 같다.

-최근 정치권 포퓰리즘이 계속되고 있다.

▶**구 관리관**=행정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국회만 없으면 일할 만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만 소위 지역구 의원은 국민보다는 지역구 주민 의견을 우선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뭘가를 하고 싶어도 의원들이 이익그룹에 포획당하는 사례가 많다. 투자개발형의료법인 도입과 일반의약품(OTC) 약국의 판매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이 교수**=정치인은 표를 위해 무

정부에 대립을 때리려는 적하는 것이고 대기업들도 맞는 적만 하는 것이다. 제2단계 정경유착이다. 과거 1단계가 기업이 돈을 대주고 정권을 유지하도록 도와줬다면 지금은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가 도움을 청하고 재벌이 이에 응하는 식으로 진화했다.

▶**한 사무처장**=결국은 기업 스스로 의식과 관행을 바꿔야 한다. 제2차 법 집행보다도 사회적 압력이 가해져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 금도를 지키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을 주는 평판 효과(reputation effect)를 작동시켜야 한다.

▶**김 실장**=세계적으로 기업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다. 대기업 혼자 안 되고 부품, 소재업체, 심지어 통

“국회만 없으면 일할 만하다”

행정부 무늬 간과해선 안돼

“정책에 영혼이 있나? 없다”

포퓰리즘이 결국 경제 망쳐

는데 두터져 잠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잠깐 잡히는 듯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 사무처장**=정부 실패가 있듯이 시장 실패도 존재한다. 문제는 정부 개입 정도와 시기가 적절했느냐 여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실행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역할이 강했지만 과연 모든 것을 관치로 볼 것이냐는 고민해 볼 문제다.

-관치와 시장경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이 교수**=정부는 이제 시장을 '통제'가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장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와 관치의 야합이다.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 관리관**=시장이 무결점이고 순조롭게 굴러갈 것 같지만 시장도 불완전하고 부작용이 많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아닌가. 건설시장도 마찬가지다. 최자가 나찰제가

조건 반대 아니면 찬성이다. 솔직히 정책에 대해 영혼이 없다. 안철수 돌풍도 그래서 일고 있는 거다.

-어떻게 포퓰리즘을 견제해야 하나.

▶**이 교수**=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이념논쟁과 포퓰리즘에 빠져 있을 때 대통령이 "민고 지지해 달라"며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법 여론조작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솔직히 지금도 정부가 우호적 학자만 불러 놓고 정책을 만들지 않나.

▶**구 관리관**=국민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용기 있는 지식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언론이 국가 방향성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소통과 진정성을 중시하지만 결국 국민의 표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자꾸 까먹는다.

-질점 후반기에 접어들어 대기업 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교수**=정부는 유한하고 재원은 무한하다'는 말이 생각난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

신까지 융합돼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업 총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공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접근을 모색한다면.

▶**구 관리관**=대기업이 존재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시혜적 조치와 관치도 있었겠지만 국민의 뜻과 말이 있었다.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기업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빨리 변하지 않으면 외부 규제도 불려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교수**=중소·벤처기업을 하려면 과도한 규제, 고임금, 노사분규, 조세 부담, 높은 펀딩과 담값, 그리고 낮은 사회적 대우라는 '칠거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사회적 대우가 너무 낮다 보니 초등학교생에게 '커서 뭐 될 거냐'고 물으면 아무도 벤처기업인이 되겠다고 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

박종근·이재철 기자·사진/박상선 기자 <시리즈 끝>



최각규 前 경제부총리 / 손병두 前 전경련 부회장 / 최종찬 前 건설교통부 장관

이병철 부른 박정희 장관 “경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5·16 군사쿠테타가 발생한 지 12일 이 지난 1961년 5월 28일.

군사혁명군은 재벌 총수들을 부정축재자로 줄줄이 연행했다.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구성됐고 부당이익은 모조리 환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후 6개월 뒤 이 사건은 모하계 경제기획원 창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립으로 이어진다.

“정부 주도-민간 개발”이라는 독특한 한국의 개발경제 모델이 탄생한 순간이다. 정권과 기업 모두 서로 살기 위해 협조한 이 모델은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인 병폐의 시작이기도 했다.

“당시 기업인 13명을 부정축재자라고 해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했죠. 이 병철 회장만 일본에 있어 수감되지 않았습니

다. 이 회장은 김포공항에 귀국하자마자 본인도 서대문형무소로 가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뜻밖에 메트로호텔이라는 곳으로 가서 박정희 장관을 만났습니

다. 이 자리에서 당시 박정희 장관은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를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 회장에 물었다. 이 회장은 “기업인들을 감옥에 넣지 말고 그분들의 경영능력을 살릴 것”을 건의했다.

순전 부회장은 “이 회장을 비롯한 전 경연 초기 멤버들은 기업인들을 경제개발에 참여시키고, 부정축재 환수금을 경제개발계획에 투입하고, 부족한 국내 자원을 대신해 해외 차관을 들여와 경제개발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회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재건을 위해 모든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기획원을 설립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젊고 각기 있는 공무원들을 끌어모았다. 최 각기 전 경제부총리도 이 중 한 사람이었다. “5·16 혁명정부 수립 후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경제 재건’이었죠. 경제기획원 설립은 혁명정부 수립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개발 기업의 신용은 돈도 허위에서 돈을 빌려오기 어려운 탓에 정부 기업이 대표해 꾸어왔고 이를 일부 기업이 대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증자돈

을 마련하기 어려워 기획원이 택했던 전략은 정부 주도 차관도입이었다”고 회고했다.

순전 부회장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장원기계단건립은 자주국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거론하니 박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해 중공업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했습니

다. 당시 1000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경제개발에 쏟아부은 막대한 돈은 차관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시민들이 저축해놓은 돈도 활용됐다. 최 전 부총리 주도로 예금의 일부(30%)를 ‘국민투자기

금’으로 만들어 이를 중화확단지 건설

기업인의 경제개발 참여 해외차관 필요성 강조 등 개발경제 아이디어 제언

에 투자했다. 그러나 그는 “중화확공업 가동에 따른 자본이익은 국민 참여 기회 없이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돌아갔다”며 “당시 이 계획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어렵게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우대는 대단했다. 매일 청와대에서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개최돼 기업의 모든 애로사항이 그 회의에서 한방에 해결됐다. 이후 한국 경제에는 재벌이 속속 탄생했다. 베트남전쟁으로 한진그룹이 컸고, 중동 건설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만들어졌다.

현대는 중동에서 담배를 팔아와 현대조선과 현대중공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재벌 위주 개발정책은 각종 부당성 문제를 야기시켰다. 200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최종찬 전 장관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옛날부터 자원배분을 더 했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도로건설에는 한때 15조원 가까운 돈을 넣었지만 주택 건설에는 인색했다”며 “그러나 임대주택은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회 인프라스 트럭처적인 공공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진우·전병득·이기환 기자

한국산업대전 2011
- 금속, 공구, 전기, 인쇄, 플라스틱, 기계 (6개 전시회 동시관람)

2011년 지식경제부, Global Top 전시회 선정

KOREA 금속산업대전 METAL WEEK 2011
International Metal Industry Technology Exhibition

9.28(수) ▶ 10.1(토) KINTEX 1홀
10:00~17:00

www.korea-metal.com

| 날짜 | 시간 | 장소 | 제목 | 강연자 |
|------------|-------------|----------------|--|------------------------------|
| 9월 29일 (목) | 13:00~14:00 | 1전시관 204호 | 마이크로/유압 정밀 가공의 자동화 및 부품 산업 현황과 전망 | 현대차 자동차사업 연구소 유원준 이사 |
| | 14:00~16:00 | 1전시관 204호 | 포어 오버레이션 코팅 | 휴먼기공공업 |
| | 13:00~14:00 | 1전시관 204호 | 새로운 개념 한일 시공현장 | POSCO 신원테크그룹 참가팀 그룹장 |
| 9월 30일 (금) | 14:00~14:40 | 1전시관 204호 | 냉간단조 설계요소 | 신원테크그룹 연구소 |
| | 14:40~15:20 | 1전시관 204호 | 로봇(인도) 기계공학용 용도 및 LSP 활용 관련 정보 | 태양금속공업 |
| | 15:20~16:00 | 1전시관 204호 | PLM과 3D CAD를 활용한 설계 데이터 관리 | 삼성전공 경영총무부 |
| 10월 1일 (토) | 14:00~16:00 | 1전시관 1홀 내 세미나실 | 한국인사내부기술세미나 - 기계제조업 및 조립기술 | 한국인사내부 한창욱 (T. 031-666-0005) |
| | 14:00~16:00 | 1전시관 1홀 내 세미나실 | 파스너 가족의 날 행사 (파스너, 해외 마케팅 우수업체 시상, 마케팅 영업 우수사원 시상 등) | 한국인사내부 공업협동조합 |

2011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기술세미나 및 참가업체 세미나
문의: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T. 02-2026-4680)

| 날짜 | 시간 | 장소 | 제목 | 강연자 |
|-------------|---------------------|------------------|-----------------------|-------------------------|
| 9월 29일 (목) | 09:00~09:40 | 1전시관 1홀 내 세미나실 | Registration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태웅 박사 |
| | 09:40~10:00 | | Opening Ceremony | VIP |
| | 10:00~10:40 | | 다이캐스팅 시험금 개요 및 기술동향 | 한국기계연구원 김기영 교수 |
| | 10:40~11:20 | | 다이캐스팅 공학 소재 및 열처리 | 한국기계연구원 박정민 연구원 |
| | 11:20~11:50 | | 다이캐스팅 산업 발전전략 (안) | 한국기계연구원 한용선 연구원 |
| | 11:50~12:30 | | Lunch | |
| | 13:00~13:40 | | 다이캐스팅 부품 불량저감 기술 및 사례 | 에니캐스팅 윤용욱 부장 |
| | 13:40~14:20 | | 다이캐스팅 공학 냉간단조 기술 및 사례 | STI CAD 송기원 대표 |
| | 14:20~14:40 | | Coffee Break | |
| | 14:40~15:40 | | 다이캐스팅 용해 및 용탕물질 향상 | Strikowstolen (Germany) |
| 15:40~16:40 | 고진공 다이캐스팅 기술동향 | Fondarex (Swiss) | | |
| 16:40~17:40 | 친환경 전동식 다이캐스팅 예신 | Toyop (Japan) | | |
| 17:40~18:30 | Free Discussion/ 폐회 | 강연 및 주최측 | | |

2011 다이캐스팅 전문기술 세미나
문의: 한국다이캐스팅공업협동조합 (T. 02-716-1611/2)